

# 부모 빚 대물림... “악순환 끊는다”

##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안

인천지역 내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저임금·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예술클럽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27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심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우선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

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방법·신청절차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도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학교예술클럽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이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 받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에서 상속채무로 인해 고민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교예술클럽은 낮은 고용안정성, 저임금 등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한 약자들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장의 직위를 떠나 한명의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맞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이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27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 통과됐다. (사진=인천시의회)

# 경기도 초·중학교 ‘코로나와 전쟁’

## 장현국 도의장, 현장 방문 일선 교육현장 고충 파악

장현국(민주당, 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새 학기를 맞은 경기도역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

원 신흥초등학교와 용인 상현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교실·도서관 등 교내 시설별 코로나 방역물품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각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신봉초 차담회에는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호관 신흥초 교

장이, 상현중 차담회에는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강원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환 상현중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일선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사업’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 의장은 “학교는 학생이 친구와 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 민생현장에서 직접 현장상황 및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김인창 기자



광명시의회는 25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 지선 대비 공직자 공직선거법 교육

### 광명시의회 의원 대상

광명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인혜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정치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

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이 끝난 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직선거법 등 궁금증을 해소했다.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란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 박용석 기자

## “위례신도시 학암천 정비 LH 주체되어야”

###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민주당, 가선거구) 부의장이 2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 학암천 정비사업 주체를 LH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강 부의장은 “위례신도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즐겨찾는 산행지인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학암천 주변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학암천 정비사업은 이용자의 편

의 및 하남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위례신도시가 조성됐으나 이와 인접한 학암천은 신도시와의 부조화 및 미관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학암천 정비사업은 하남시와 LH와 협의로 공사비 부담은 LH, 공사추진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다”며 “LH가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학모 기자

### 경기도의회 임시회 이모저모

#### “경기도 체육인 인권 보호”

#### 특수학급 설치 쉬워진다

#### 경기도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강태형 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민주당, 안산6·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설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했다. 신고 및 상담 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보

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강 의원은 “신고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전예방·실태조사, 인권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경자 도의원 발의**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민주당, 의정부1·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성준모 도의원 발의**  
경기도교육도서관의 저조한 이용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민주당, 안산5·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지자체 도서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 달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은 매년 사업 예산배정 순위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 또한 저조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강

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경기도교육도서관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문화 중심기관이자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세부 시행계획 시행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도서관의 기능과 업무 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사항을 담았다.

## 빈집·소규모주택에 공공임대주택을

## ‘스몸비’ 방지 위한 음성 보행신호

## 경기도 해외 대표사무소 설립

**정대운 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민주당, 광명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돼 용적률이 상향되거나 법적상한용적률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박창순 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민주당, 성남2·사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박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근 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민주당, 안양3·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해외관광시장 다변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해외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등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경기관공사는 방한 관광객이 많은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상해·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에 해외 관광 홍보 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 사무소 및 민간기관 내에 한 시적으로 설치돼 사업연계성,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관공사 업무에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한다면 현지에 공식 허가된 해외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RO)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 관광정책의 추진과 안정적인 현지 네트워크의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